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새내기 유권자 낭랑 18세, 우리 정치에 바란다

권성주 외 3인 청소년자치연구소 활동가

### 만 18세에게 수능보다 참정권이 중요할까?

권성주\*

청소년자치연구소 활동가 1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기치로 세워진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참정권을 얻은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고, 프랑스와 일본 등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차츰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흑인은 또 어떨까. 미국에서는 1870년 흑인(남성)의 투표권을 인정했지만 POLL TAX와 LITERACY TEST를 투표의 요구조건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그들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흑인 민권 운동이 극단으로 치달은 1964년과 1965년에 민권법과 투표권법이 제정되며 드디어 흑인들에게도 평등한 참정권이 보장된 것이다.

참정권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있어온 것으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인은 만 18세가 아니라서 만 18세 참정권은 아무래도 괜찮다면, 지금까지 여성과 흑인은 어떻게 참정권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그 시절 기득권은 유럽부터 미국까지 백인, 남성, 유산계급에게만 주어졌다. 그 시절에는 화이트 태닝도 불가능하고, 성전환수술도 불가능하고, 로또도 없었으니 세 조건 모두 선천적인 부분에서 차별장벽을 친 셈이다. 기득권은 그들의 권력과 재산을 나누기 싫어하고, 사회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흑인 빈민 여성에게 적선을 할 수는 있어도 그들과 동일한 한 표를 받기는 당연히 싫을 수밖에. 이를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나서면, 비기득권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당연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정치가 항상 독재와 왕정으

\* 소속: 제 3기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대표자회 회장, 고려대학교 입학생  
주된 관심 분야: 인권, 법률, 정치

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시민혁명 시민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해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만 18세가 되기 전부터 청소년 활동을 하며, 여러 정책을 접했고 다른 청소년들과 의견을 나누며 정부에 제시하곤 했다. 만 18세 참정권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플래시몹을 진행하거나 설문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 때는 물론 이게 될까?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이 이슈가 잊혀져 사라지는 게 싫어서 끊임없이 제안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결국 2019년 12월 27일 결실을 맺었다.

나는 버스에서 뉴스로 접하면서 많은 감격을 받았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만 18세 참정권을 찬성하는 이들도 분명 많지만 만 18세 중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 참여는 ‘우리의 몫’ 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해두는데,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사회를 설계한다. 참정권을 갖지 않는다면 만 18세를 위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나는 만 18세 참정권이 현재의 잔인한 대입제도, 교육과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고등학생들의 피라미드식 교육과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알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는지 알면서도 그들이 방관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이 그들의 관심 밖인데다가, 일렬로 세워져 성적대로 자르는 것이 서열을 매기고 패배자들을 납득 시키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만 18세 참정권을 기점으로 고3 학생들이 유권자 풀

안에,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사실 아직은 부족하다. 만 17세, 만 16세까지는 가야 본격적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살 어려진 것만으로도 다음 대선, 다음 총선 때는 만 18세를 겨냥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해야 할 과업이 하나 더 느는 것쯤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 예겐 수능보다 만 18세 참정권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겠다. 수능이라는 시험도 충분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참여의 권리를 얻게 된 것은 다음 세대가, 또는 어쩌면 우리 세대가 대학을 가고 중등 교육이 시행되는 환경을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에 찌들어 경쟁해야만 하는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책들을 볼 시간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만 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주눅이 드는 게 맞는 건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대입을 마쳤지만, 다음 청소년 활동은 공부에 갇힌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은 학생은 공부가 본문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본인들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만 18세 역시 정치사회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치사회의 주체라는 말은 더 이상 고등학교나 교육 문제에 대해 누군가가 나타나 바꿔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교육 현장에 있는 정치 주체로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피력할 수 있는 능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라미드식 등급제, 공부/예체능/기술로 삼분되는 직업관, 대학 서열화 등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생겼고, 한 번에 모

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천천히 방향을 틀어가며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 끊임없이 기억하자. 우리는 이제 그럴 자격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부탁이 있다면, 제발 청소년이나 청년을 마네킹으로 세우는 홍보 사업은 그만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느낀 바에 따르면, 그들은 청년과 함께 정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본인들의 청년 정책에 홍보모델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정당이 많은 계층을 대변하는 열린 곳으로 홍보하기 위해 쓰는 것뿐이다. 물론 그런 식으로라도 청년을 쓰지 않아 평균연령이 60.1세가 나오는 정당도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청년이 청년관련 정책 ‘만’을 대변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청년과 중장년 모두 같은 정치참여 담론의 주체로서 활동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게 이루어져야만 프랑스처럼 청년 대통령도 나오고 청년 정치인이 청년 홍보모델이 아닌 평범한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청소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김소현\*

청소년자치연구소 활동가 2

나는 작년 12월 27일 ‘만 18세 선거권 법’이 통과하지 못했으면 올해 4.15 총선 때 투표권을 갖지 못했을 청소년이자 올해 3월에 대학 입학 앞둔 새내기이다.

2017년, 고1 입학을 앞두고 청소년자치연구소라는 곳을 통해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속에 다양한 활동들 중 청소년기자단 활동을 3년간 해왔고, 활동하는 가운데 느꼈던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자로 위촉을 받고 가장 먼저 썼던 기사가 ‘정치는 청소년들이 범해서는 안 될 세계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칼럼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12월 20일에 예정됐던 대선이 5월 9일로 대폭 앞당겨지면서 2017년 기준 20살이 된 성인의 절반 이상이 투표권을 잃게 됐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했다. 만 19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잃었던 가장 큰 이유를 19금 정치로 꼽았고, 이 시점에서 19금 정치를 끊어내지 못하면 많은 20살 청소년들이 정치적 권리를 빼앗길 수 있음을 알리려 했다. 그 후에도 대선 5월 9일 선거일에 투표소 앞에서 ‘김소현은 18세 선거권을 지지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내가 그토록 18세 선거권을 외쳤던 이유는 기사에서 밝혔듯 정치적 권리를 잃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 이유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컸다.

특정 대상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그 대상과 함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불과 두달 전 만해도 선거권은 어른에게만 있었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표가 없던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소속: 청소년자치연구소 ASPECT청소년기자단, 군산대학교 입학생  
주된 관심분야: 사회복지, 청소년활동, 사회참여, 정치

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러 투쟁의 과정안에서 청소년들이 비로소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만 18세 선거권 법 통과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민의 끝을 의미하는 신호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신호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선 후보자들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응원 받는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정치참여는 청소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러한 행동들을 정당화 시켜서도 안 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위치에 맞게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무조건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청소년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배우고 실천했을 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청소년에서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는 시민청소년의 기본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키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첫 선거, 청소년 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

강민혁\*

청소년자치연구소 활동가 3

새내기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학생연합과 청소년연합을 만들어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갖기 운동, 내가 교육감이라면, 시장이라면 뿐만 아니라 직접 홍보지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의원에게 전달까지 했다.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중 156명의 찬성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은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 7,297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이번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해 약 50만 명의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나는 새내기 유권자가 된다는 것에 마음이 기뻐다. 예비 정치후보자들은 졸업식, 입학식 등에 청년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졸업식이 취소되고 대학 입학식이 연기되어 예비 후보자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지점이다.

\* 소속: 청소년자치연구소 ASPECT청소년기자단, 달그락 21대 총선 정책참여활동 TF팀장  
주된 관심분야: 정치

일각에서는 18세가 무슨 선거를 하나는 듯이 보기도 한다.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교육일지 갑론을박 논의가 많다. 그러면 20살, 21살 청년은 선거 교육을 받는가? 여기서 의문이 든다. 투표는 자신만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 투표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이 늘어난다면 피선거권 연령도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교사가 정치관념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인이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학생들이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80년대가 아니다. 2020년이다.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논쟁적인 것은 토론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18세 선거권 통과 이후 언론을 살펴보면 대세는 ‘청년’이라는 말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당이든 20대, 30대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려면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다수의 동의를 얻고 만들어 가야한다. 이러한 전례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이제 선거권을 넘어 청소년 참정권 보장으로 나아가 청년 후보, 청년 국회의원이 국회 개혁을 하여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 만 18세 선거권 더 좋은 사회를 향해 한 발짝

김정현\*

청소년자치연구소 활동가 4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는 만18세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한다.

이로써 나도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2017년 만 18세 선거권 보장 캠페인을 하며 언제쯤 선거권이 부여될지 막연한 미래로 느껴졌는데 약 3년 만에 선거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만 18세 선거권을 외치던 내가 성인이 되던 해에 투표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떨렸다. 하지만 아직도 만 18세 선거권을 반대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만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가 정치 선전으로 가득한 현장으로 바뀔 수 있고,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만 18세 선거권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자신들이 정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거라고. 만 18세 선거권은 꼭 필요한 거라고. 지금까지는 모순되게도 가장 교육에 발 담그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어른들이 투표하여 결정한 대로 따라야만 했다. 나는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회가 청소년들에게는 ‘정치는 청소년들과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어른들에게는 ‘청소년들

\* 소속: 청소년자치연구소 ASPECT청소년기자단, 달그락 21대 총선 정책참여활동 TF팀장  
주된 관심분야: 정치

은 정치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만 18세 선거권이 이러한 인식을 없애주고 청소년들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 간과했다면 간과했을 청년을 위한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펼쳐 나갈지 궁금하다. 그저 선거 때 한번 청소년, 청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회용 정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없애거나 낮추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청

소년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생각을 깨뜨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청년,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모순된 세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보다 보장된 사회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고, 민주주의에 두 발짝 다가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기회 확대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당연한 권리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면 이 사회는 보다 좋은 사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